

# 광주·전남 '예산폭탄' 기대난

국회 오늘부터 예산 심사...내년도 국고확보 비상

본회의 자동부의 '쪽지 예산' 근절로 야당 입지 좁아져  
정부안 반영률 영호남 격차 커...이정현 의원 등에 기대

내년 나라 살림살이를 좌우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국회 선진화법의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시행되는 '원년'이라는 점에서 야당의 '버티기'가 쉽지 않아 예결위 차원의 광주·전남 국고 예산 반영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국회 선진화법 효과=국회가 이번만큼은 법정 시한(12월 2일)에 맞춰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개정 국회법의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조항이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예결특위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심사를 마쳐야 하고,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12월1일) 정부 예산안이 그대로 본회의에 부의된다.

따라서 여야 간 정쟁에 휘말려 예결특위의 예산안 심사가 지연되더라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산 폭탄 주목=국회 예결위 차원의 지역 국고 예산 확보 여부도 관심사다. 정부 예산안에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예산 반영률이 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박주선 의원(광주 동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업과 관련 광주시는 내년도 예산으로 384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 예산안에는 신청액의 23%인 865억원이 반영되는데 그쳤다. 전남은 8580억원을 신청했지만 10%(837억원)만 반영됐다

반면, 대구는 신청액의 89%인 4294억원, 경북은 신청액의 65%인 3895억원, 경

남은 신청액의 93%인 2549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국회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예산안 자동부의 조항이 야당의 입지가 크게 좁아진 데다 여야 모두 '쪽지 예산' 근절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장병완 의원이 새정치연합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고 전북의 이춘석 의원이 국회 예결위 간사를, 황주홍 의원이 계수조정소위에 포진하고 있어 기대를 걸어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에 배정됨에 따라 7·30 재보선에서 내세웠던 '예산 폭탄' 실현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이정현 의원의 계수조정소위 참여로 일단 국회 차원의 광주·전남지역 예산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규모가 문제다. '예산 폭탄'이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의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의원이 정부안에 순천과 곡성 지역의 굵직한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데 힘을 썼지만 국회 차원에서 광주·전남지역 국고 예산을 전반적으로 챙기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일각에서는 예산 확보 성과가 좋지 않을 경우, 7·30 재보선의 승리를 이끄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예산 폭탄'이라는 카피가 이 의원에게 정치적 부담을 주는 부메랑으로 작용하지 않느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영호남 시도지사 5·18묘지 참배 이낙연 전남지사(오른쪽부터), 윤장현 광주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지사가 5일 오후 5·18 국립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이들 단체장은 이날 광주MBC가 주관한 '희망대토론' 방송 녹화에 앞서 5·18 묘지를 찾아 오일 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영호남 화합을 통한 새희망을 약속했다. <광주시 제공>

## 가난한 이웃에 대한 애정 담긴 '이삭줍기'



(90) 가을걷이

"저는 시방 쪽 텃 밭 향아리 갈기도 하고, 또 텃 밭 들녘 갈기도 하옵니다. 하늘이여 한동안 더 모진 광풍을 제 안에 두시든지, 나는 몇 마리의 나비를 두시든지, 반쯤 물이 담긴 도가니와 같이 하시든지 마음대로 하소서. 시방 제 속은 쪽 많은 꽃과 향기들이 들판에서 도리어 '텃 밭 흥만'이 차오른다." <서정주 작 '기도 1'>

가을걷이가 끝난 들녘은 가을 풍경의 절정이다. 들판은 계절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해주지만 황금빛 나라, 추수 마친 텃 밭 대지의 빛깔은 그 모습 그대로 감동이다. 빈 들판에서 도리어 '텃 밭 흥만'이 차오른다.

농민화가 장 프랑스와 밀레(1814~1875)의 그 유명한 작품 '이삭줍기' (1857년 작)에는 그런 감동이 있다. 구도나 색채가 지극히 고전주의적인 이 작품은 세 여인이 저물 무렵 엄숙한 분위기에서 평화롭게 일하는 농촌 풍경이다. 처음 이 작품이 1857년 살롱전에 출품되었을 때 화단에서는 두 갈래 비평으로 논란이 됐다. 이삭줍기



밀레 작 '이삭줍기'

는 농민들 중에서도 가장 하층민들의 일인데, 그림에서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들의 자세가 우아하게 묘사되어 현실감이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런 가하면 전원생활의 가혹함을 보여주는 혁명적인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당시 프랑스가 변명과 풍요의 새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대대적인 주장을 하던 때였지만 밀레는 도시와 시골의 빈민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다고 생각했다. 지주가 수확한 곡식을 마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삭을 줍는 것조차 시의 허가를 받아야 했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성경에서도 '추수할 때 말뚝이에 있는 곡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했다. 이삭은 가장 가난한 이들의 최후의 식량이었다. '이삭줍기'는 가난한 농민에 대한 밀레의 깊은 애정이 담겨있는 작품이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 "도시철도 2호선 광주시 결정 못 기다리겠다"

### 광주시의회 독자 여론조사 나서

광주시도 공청회 거쳐 여론조사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재검토 논란이 지역의 대표적 갈등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의회가 시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광주시의회는 5일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타당성 여부와 관련,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기관을 통해 시·구의회를 포함한 시민 1500명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시민의 발인 지하철 건설 여부 등 중대 결정 사항에 대해 윤 시장 대신 시민의 뜻을 직접 묻기로 했다"며 "시의회는 이 결과를 집행부에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또 "2호선 건설은 지난 10년간 행정적, 사회적 건 논의와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기본적으로 용역 추진 등이 진

행돼 왔다"며 "국토교통부도 이달까지 건설 여부 등 입장정리를 요구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기관은 서울과 지방 등 2곳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가 갑작스럽게 여론조사에 나선 것은 윤장현 시장이 이달말까지 TV토론과 공청회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고 했지만, 시민 여론조사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의회는 방침이 알려지자 광주시도 "도시철도 2호선과 관련, TV 토론회와 시민 공청회 등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시민과 공유한 뒤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의 결과가 다르게 나올 경우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과 푸른길, 에코바이크, 광주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의 도시철도 2호선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최원일기자 cki@

## 선거구 재획정 공동대응...농어촌 국회의원들 뭉쳤다 '주권 지키기' 모임 결성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여야 국회의원들이 5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농어촌 지역의 대표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공동 대책 마련에 나섰다.

새누리당 황영철·장영석·이철수·경대수·박덕흠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유대운·김승남 의원 등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모임을 하고 '농어촌 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모임'을 결성했다. 이들은 새누리당 황영철, 새정치민주연

합 이윤석 의원을 공동간사로 선임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간사를 맡은 이윤석 의원은 "국가의 예산과 복지·교육 등 손길이 미쳐야 할 곳은 농어촌인데, 현재의 이번 결정은 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시 국회의원 46명인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서울시 면적의 22배"라면서 "예산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지방자치가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현재의 결정은 전혀 현실을 모르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김승남 의원 역시 "현재가 개헌 논의가 활발히 움직이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은 지극히 정치적이면서 작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며 "조소한 시일 내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빨리 가동해서 농어촌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현재의 결정

에 대한 우리의 문제제기는 단지 의식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서 농어민과 지방민들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봐 달라"며 "지금 상대라면 지속적으로 농어촌과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고, 농어촌과 지방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정치와 국정운영은 도시와 수도권 중심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우리나라 최고의 명품해양관광 중심

# 여수에 오면 행복해집니다

남해안권의 중심인 여수항과 국제 해양관광단지 경도의 전경.